

“입법독재” “검찰독재”... 여야, 盧 정신 계승 강조 속 설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여야 지도부 대거 참석

여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무현 정신'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 통합과 상생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며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협치의 정신이 절실한 때”라며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

서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독재’는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전 노 전 대통령은 탈권위로 시작한 개혁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노건호씨,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연금개혁 관련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임종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

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연금 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의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22대 개원 즉시 거부권 법안 속도감 있게 추진”

민주당 국회 당선인 워크숍 “당원 중심 당 만드는데 노력”

23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며 양극화·기후 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 대응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함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탈표’ 17명 나올까

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여당 찬성표 몇 표 나올지 관심

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 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이동·김용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탈표가 두 자릿수 규모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뜻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부 찬성파는 이탈표가 10표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김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

에서 “10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라며 “이탈표가 거의 없으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무기명 투표에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두 자릿수의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른 표결”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상대 당의 분열을 획책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여당의 이탈표 규모는 22대 국회에서 전개될 ‘특검 시즌2’의 가능자가 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고객 한분 한분
2,300만 고객이
MG의 든든한 시작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키운 금융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새마을금고